

공 개



의안번호	제 20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2. 6. (제 21 차)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2. 6.

1. 의결주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4.1.12일 시행 예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자산보유자 확대(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요건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구체화함

② 정보공개 의무 부과(감독규정 제18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하고, 예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③ 위험보유 의무 도입(감독규정 제18조의3)

계약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하는 자를 위험보유 주체로 규정함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아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되는 유동화증권의 구체적인 구조를 열거함

자율성을 위해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위험보유 방식을 허용함

④ 업무수탁인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체화(감독규정 제16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직원 겸직·파견 금지, 부서·공간·전산자료 분리 등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체화함

⑤ 정보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 관련 제재

(감독규정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1, 별표2)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험보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⑥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회계처리기준 10호, 14호, 18호, 25호)

기초자산 확대,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 허용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중
(규제신설·강화 3건)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8.11.~9.20.)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3) 회계제도심의위원회(2023.10.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별지 1 >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3. 삭 제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금융위가”를 “감독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평가금액”을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조의2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출 것
2. 자산관리부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4.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16조의2제2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5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 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 자산유동화계획기간
5.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

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②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해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

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 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2.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함”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35조”를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

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로, “금융위”를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 (1) 과징금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 (5)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38조의3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 법 제38조의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준금액은 법 제38조의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권을 보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보유하지 않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법 제33조의3에 따라 보유해야 할 유동화증권의 발행잔액과 실제 보유한 유동화증권의 발행잔액의 차액을 이 규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복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하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구분 중요도	상	중	하
의무보유 위반비율 ^{주)}	100%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주) 의무보유 위반비율은 동일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유동화계획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의무보유 위반비율} = 1 - (\text{의무보유한 금액} / \text{의무보유 해당액})$$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위반 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의무보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과징금의 감면

- (1) 위반자가 법 제38조의3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7일 이내	8~10일	11~15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 (2)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4)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조정 후 과징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최저부과액

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3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7. 과징금 납부에 대한 담보의 징구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8.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시행령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결과	동기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사유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치유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공개·보고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공개·보고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

나. 법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법규위반 결과]

- 유동화증권 시장에 미친 영향, 유동화증권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 (1) 사회적 물의 야기
- (2) 중대
- (3) 경미

나. 판단기준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 물의 야기	A	C	D
중 대	B	C	D
경 미	D	D	E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제33조의3 위반의 경우에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4.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4) 과징금 조치 대상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 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u></p> <p><u>1.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부터 BB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u></p> <p><u>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u></p>	<p><u>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u></p> <p><u>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u></p> <p><u>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u></p>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3.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신용평가업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
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
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
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평가의견서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3. 삭 제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제8항-----

② · ③ (생략)

제6조(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② (생략)

<신 설>

③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조(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 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금융위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변경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

제7조(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 ① -----

감독원장이 -----

-----.

서 삭제>

<단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의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유동화자산에 대한 평가내용 및 평가금액

3.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자산관리의 위탁 등) (생략)

<신설>

제8조(평가의견서의 기재사항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평가금액(단, 유동화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산관리의 위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행령 제5조의2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 부서는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3.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 부서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5. 신용평가업자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 6.·7. (생략)

<신설>

건을 금지할 것

4.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 부서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것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

-----.

1. ~ 4. (현행과 같음)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5. 신용평가회사-----

- 6.·7.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

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 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 자산유동화계획기간

5.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 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②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 (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 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 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 「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헤지된 경우에 한한다.

3.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4.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 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신고사항) 유동화전문회사등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사유
가 발생한 때
2.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이 파산 또는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자산관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
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
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과 관련하
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
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
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 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
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
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
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
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
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
· 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
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
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
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
환받은 경우
2.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
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
한 문제가 발생한 때

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5.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23조(조사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이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조사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② -----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 3, 제42조-----
-----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

④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별지 2 >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호 중 “표시한다),”를 “표시하며, 장래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호 중 “기타의”를 “지식재산권, 기타의”로 한다.

제14호 중 “유동화자본”을 “자본잉여금, 유동화자본”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사원의”를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또는 사원의”로 한다.

제18호 중 “주당손익”을 “주(좌)당손익”으로 한다.

제25호 중 “유동화자본주당순손익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이 있는”를 “주(좌)당순손익은 유통보통주식수 또는 유통출자좌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출자증권 발행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로 한다.

제39호 단서 중 “손상된”을 “감액된”으로, “손상되지”를 “감액되지”로 한다.

부록 제1호의 A3. A6을 다음과 같이 한다.

A3. 유동화전문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최후배분순위권자는 설립 당시 주주 또는 사원이며, 그의 1주 또는 1출자좌수당 순손익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목적 및 주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 또는 유통출자좌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출자증권 발행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주(좌)당순손익을 계산·공시토록 하였다.(문단25)

A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가능한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로 제한하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특성상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바,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 기본구조에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부록 제2호의 A7, A8 및 A9를 다음과 같이 한다.

A7.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문단4)

(가) “자산유동화”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다.

-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 또는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2)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3)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산보유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및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있다.

(다) “유동화자산”에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장래채권 포함)·부동산·지식재산권·기타의 재산권 등이 있다.

(라) “유동화증권”에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 등이 있다.

(마)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A8. 재무상태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문단9)

A9.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부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 : 원)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xxx		xxx
1. 현금 및 현금 자산				
2. 단기 금융 상품				
3. 단기 금융 투자				
가. 만기도기				
나. 만기도기				
다. 만기도기				
4. 미수금				
5. 선금				
6. 미수금		xxx		xxx
7.				
II. 유 동 화 자				
1. 유 동 화 채				
가. 유 동 화 매출채권				
나. 유 동 화 매출채권				
2. 유 동 화 부 동		xxx		xxx
3. 유 동 화 부 동				
4.				
III. 비 유 동 자				
1. 장기 금융 투자				
2. 장기 금융 투자				
가. 만기도기				
나. 만기도기				
다. 만기도기				
3. 이 연 법 인 세 자 산				
4.				
자 산 총 계				
부 채				
I. 유 동 부 채		xxx		xxx
1. 단기 차입				
2. 미지급금				
3. 미지급비용				
4. 유 동 성 미지급 배당금				
5. 유 동 성 장기 차입				
6.				
II. 유 동 화 부 채				
1. 사 할 증 (할 인) 발 행 차				
2. 후 순 위 사 채				
3. 할 증 (할 인) 발 행 차				
4.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액		금액	
I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비 2. 장기미지급비 3. 미지급배당부 4. 이연법인세부 5.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본금		xxx		xxx
I. 자본잉여		xxx		xxx
II. 자본잉여		xxx		xxx
III. 유동자산		xxx		xxx
IV. 자산		xxx		xxx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xxx
VI. 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		xxx		xxx
자본총계		xxx		xxx
부채와자본총계		xxx		xxx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xxx		xxx
1. 유 동 화 자 산 이 자 수 익				
2. 유 동 화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3. 유 동 화 자 산 운 용 수 익				
4. 유 동 화 채 권 회 수 이 익				
5. 유 동 화 자 산 처 분 이 익				
6. 대 손 충 당 금 환 입				
7.		xxx		xxx
II. 영 업 비 용				
1. 유 동 화 사 채 이 자				
2. 유 동 화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3. 대 손 상 각 비				
4. 감 가 상 각 비				
5. 유 동 화 자 산 처 분 손 실				xxx
6. 수 수 료 비 용		xxx		xxx
7. 기 타 일 반 관 리 비		xxx		
8.				
III. 영 업 이 익(또는 영 업 손 실)				
IV. 영 업 외 수 익				
1. 이 자 수 익				
2. 단 기 매 매 증 권 평 가 이 익				
3. 단 기 매 매 증 권 처 분 이 익				xxx
4. 매 도 가 능 증 권 처 분 이 익		xxx		
5. 만 기 보 유 증 권 처 분 이 익				
6. 매 도 가 능 증 권 손 상 차 손 환 입				
7. 만 기 보 유 증 권 손 상 차 손 환 입				
8.				
V. 영 업 외 비 용				
1. 이 자 비 용				
2. 단 기 매 매 증 권 평 가 손 실				xxx
3. 단 기 매 매 증 권 처 분 손 실		xxx		xxx
4. 매 도 가 능 증 권 처 분 손 실		xxx		xxx
5. 만 기 보 유 증 권 처 분 손 실		xxx		xxx
6. 매 도 가 능 증 권 손 상 차 손		xxx		
7. 만 기 보 유 증 권 손 상 차 손				
8.				
VI.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익				
VII. 법 인 세 비 용				
VIII. 당 기 순 이 익(또는 당 기 순 손 실)				
IX. 주(좌) 당 손 익				

자 본 변 동 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 계
20××.×.×(보고금액)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수정후 이익잉여금 연차배당						xxx (xxx)	xxx (xxx)
처분후 이익잉여금 중간배당						xxx (xxx)	xxx (xxx)
유상 증자(감자)	xxx	xxx	xxx				xxx
당기순이익(손실)						xxx	xxx
자기주식 취득				(xxx)			(xxx)
해외사업환산손익					(xxx)		(xxx)
20××.×.×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0××.×.×(보고금액)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수정후 이익잉여금 연차배당						xxx (xxx)	xxx (xxx)
처분후 이익잉여금 중간배당						xxx (xxx)	xxx (xxx)
유상 증자(감자)	xxx	xxx	xxx				xxx
당기순이익(손실)						xxx	xxx
자기주식 취득				(xxx)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xxx		xxx
20××.×.×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3. ----- 「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 제5조제1항제2호-----
10.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하여 <u>표시한다</u>), 유가증권, 부동산, <u>기타의</u> 재산권 등으로 한다.	10. ----- ----- ----- ----- ----- <u>표시하며, 장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 ----- ----- <u>지식재산권, 기타의</u> -----
14. 자본은 자본금, <u>유동화자본</u> ,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가) 자본금은 <u>사원의</u>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4. ----- 자본금, <u>자본잉여금, 유동화자본</u> ----- ----- ----- <u>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또는 사원의</u> -----
18.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 (아) (생략)	18. ----- ----- (가) ~ (아)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기업공시국
연 락 처	02-2100-2682	02-3145-8091